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10-42(통권 422호)  
2010.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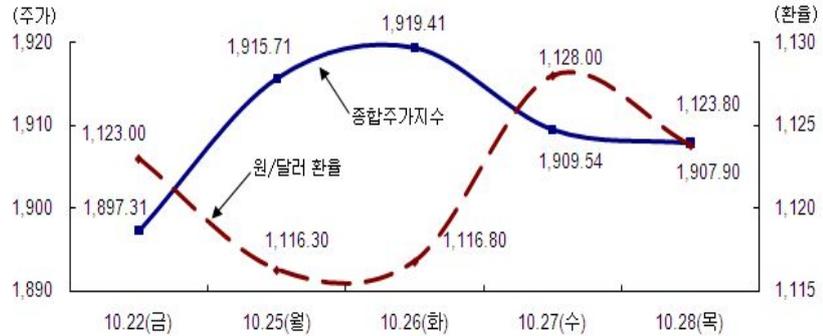


## ■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과 시사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22~10.2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과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홍 순 직 수석 연구 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 최 성 근 선임 연구 원 (2072-6223, csk01@hri.co.kr)

## Executive Summary

### □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과 시사점

##### ■ 통일비용 논의와 기존 연구의 한계점

통일비용 추정은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와 추정 모형, 통일의 시기 및 목표 수준 등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기존의 통일비용 연구는 통일편익 분석을 등한시하고, 부담해야 할 비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선 통일비용 뿐 아니라, 통일편익을 포함한 총괄적 의미의 통일비용 연구가 필요하다.

##### ■ HRI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

(통일비용) 통일비용이란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안정을 이루면서 정상운영되기 위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다. 본고에서는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목표소득과 북한경제 자립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일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최소 3,000달러 이상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남한의 투자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북한이 과거 남한의 1970~80년대 경제 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그 당시의 한계자본산출계수 등을 적용하여 통일비용을 산정하였다. 추정 결과, 3,000달러 달성에는 통일 후 10년간 약 1,570억달러, 7,000달러와 1만달러 달성에는 각각 4,710억달러와 7,065억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통일편익) 통일편익이란 일반적으로 통일로 인해 남북한이 경제적·비경제적으로 얻게 되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의미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경제적 편익 중에서 통일비용이 북한에 투자될 때 남한이 얻게 되는 경기활성화 효과와 통일로 인한 절감 효과(국방비 감축 및 국가위협도 감소 효과)로 통일편익을 한정하였다. 경기활성화 효과는 통일비용의 대북 투자로 인한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통해 추정하였다. 국방비 감축액은 남한의 GDP대비 국방비 비중 (2.8%)이 통일독일 수준(1.5%)으로 감축될 경우 절감되는 편익을 추정했다. 국가위협도 감소 효과는 통일 후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따르는 외채상환이자 부담 경감액으로 추정하였다.

(종합) 통일 이후 북한의 1인당 소득 3,000달러 달성에 있어서 통일편익은 통일비용 1,570억달러보다 약 630억달러 많은 2,200억달러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외에도 북한의 노동력 활용과 지하자원 개발, 관광수입 등의 남북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여 통일비용 대비 통일편익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 시사점과 과제

첫째,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은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며, 비용은 일시적으로 지출되나 편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홍보하여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통일방안과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통일재원의 경우, 남북협력기금 미사용분 적립이나 통일세 부과, 국채 및 복권 발행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셋째, 통일비용 최소화와 통일편익 극대화를 위해 사전적 통일비용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경제력 격차 축소를 위한 남북경협 확대가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과 지역에 대한 사전 대북 투자로 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통일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남북통일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변국들에게 이해시켜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 1. 최근 통일비용 논의

### ○ (최근 논의) 제 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확산

- 이는 소극적인 분단 관리에서 벗어나 향후의 통일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물질적·정책적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 그러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칫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통일비용 추정은 통일의 방식과 과정은 물론,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와 추정 모형, 통일의 시기와 도달 목표 수준 등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
  - 특히, 그간의 통일비용 연구는 통일에 의한 유무형의 통일편익 분석은 등한시한 채, 부담해야 할 비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 ○ 따라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선 통일비용뿐 아니라, 통일편익을 포함한 총괄적 의미의 통일비용 연구가 필요

-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총체적 의미의 통일 연구가 필요
  - 이를 위해선 통일비용뿐 아니라, 통일에 의한 유무형의 통일편익도 동시에 추정하는 '통일 순비용'(Net Unification Cost) 개념 도입이 필요
- 이를 위해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 근거한 현실적 개념의 접근을 모색하고자 함
  - 통일 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 3,000달러 달성을 위한 통일비용과 편익을 각각 추정한 후, 7,000달러와 1만 달러의 경우도 산정

## 2.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개념과 기존 연구

### 1)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개념

○ (개념)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부담하게 될 비용을 의미하고, 통일편익은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을 의미함

- (통일비용)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안정을 이루면서 정상 운영되기 위해 부담해야 되는 비용

- 통일비용은 크게 경제적 비용과 비경제적 비용으로 구분되며, 경제적 비용으로는 대북 SOC 투자 및 북한경제 재건 비용, 북한 주민 지원 비용, 남북제도 통합비용 등이 있음
- 비경제적 비용으로는 사회 혼란과 이념적 갈등, 남북간 소득격차 및 주민 사이의 이질감 등이 있음
- 이는 모두 통일 이후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서, 통일 이전의 경제 교류 협력 단계에서 지불하는 경험 활성화 및 대북 지원 비용은 제외됨
-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지출개념의 총비용을 의미하며, 통일편익을 차감한 순수한 비용을 '통일 순비용'이라 지칭함 (통일 순비용 = 통일비용 - 통일편익)

- (통일편익) 통일을 이룸으로써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으로 얻게 되는 모든 형태의 이익

- 통일편익도 경제적 부문과 비경제적 부문으로 구분되며, 경제적 통일편익은 대북투자로 인한 경기활성화 효과, 규모의 경제 실현 및 남북 경제의 시너지 효과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통일 이후 얻게 되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분단으로 인해 현재 지출되고 있는 분단유지비용 절감 및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 등이 존재
- 비경제적 통일편익은 국가 이미지 제고, 스포츠강국으로 부상,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및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을 들 수 있음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개념 >

구분	통일비용	통일편익
경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SOC 투자 및 북한경제 재건비용</li> <li>- 북한주민 지원비용(생계보조비, 실업수당, 보건의료비 등)</li> <li>- 남북 제도통합비용</li> <li>- 인구이동에 따른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부문 등의 혼잡비용</li> </ul> </li> <li>○ 북한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제전환에 따른 비용</li> <li>- 노동력 부족 및 실업 증가</li> <li>- 인플레이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의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투자로 인한 경기활성화</li> <li>- 분단유지비용 절감(국방, 외교비 등)</li> <li>- 국가위험도 감소</li> <li>-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생산요소의 유기적 결합 (노동력, 천연자원 등)</li> <li>- 시너지효과 (물류비절감, 주변국과의 교역 확대)</li> </ul> </li> <li>○ 북한의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유지비용 절감</li> <li>- 시장 확대, 기술 혁신, 생산성 제고</li> <li>- 대규모 SOC개발 및 지하자원 개발</li> </ul> </li> </ul>
비경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혼란, 이념적 갈등</li> </ul> </li> <li>○ 북한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체제의 격변</li> <li>- 사회적 혼란(체제부적응자 증가)</li> <li>- 소득격차 및 국민적 열등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의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인지도 제고</li> <li>- 스포츠 강국 부상</li> <li>- 관광·문화 산업 발전</li> <li>-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li> </ul> </li> </ul>

자료 : 조동호,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 『JPI 정책포럼』 2010. 3.을 보완.

2) 기존 통일비용 연구 사례

○ 기존의 통일비용의 연구는 학자와 기관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냄

-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는 학자와 연구기관마다 다양하게 시도해왔으며, 최소 500억~최대 5조 달러에 이르기까지 약 100배의 편차를 나타냄
- 이는 통일의 형태, 방법, 시기, 추정 방법 등 학자마다 서로 다른 설정에 기초하여 통일비용을 추정하였기 때문임 (부록 참고)
-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액은 대체로 급진적일수록, 통일 초기에, 통합시점이 늦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급진적 통일의 경우, 갑작스런 통합에 따른 위기관리 및 사회혼란 방지에 대한 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통합시점이 늦어지면 남북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소득 격차 축소 비용이 커지기 때문임

○ (기존 추정 방법)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 방법에는 크게 목표소득 방식과 항목별 추정 방식으로 구분됨

① 목표소득(Income Target) 방식

-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소득이 남한 주민의 1인당 GDP(혹은 GNP)의 일정 수준, 혹은 동일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및 총 투자액을 추정하는 방식
- 이는 단기적인 소모성 비용보다 통일 이후 중장기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추정 방법임

② 항목별 추정 방식

- 통일에 수반되는 주요 항목들을 열거하고 각 항목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추정해 이들을 합산하는 방식
- 독일 통일시 실제 투입된 비용 항목을 기초로 위기관리비용, 제도통합비용, 경제적 투자비용의 세 가지 비용으로 구분하여 추정
- 항목에 따라 단기성 소모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투자비용까지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임

< 항목별 추정 방식에 포함되는 항목 구분 >

구분	내용	주요 항목
위기관리비용	통일 직후 북한 지역의 급격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실업자 생계보조금 -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 의료 및 교육보장비 - 지방정부 보조금
제도통합비용	남북한 간의 이질적인 제도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통합 행정비용
경제적 투자비용	북한의 열악한 SOC를 확충하고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로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사회간접자본 투자비 - 경제활성화 및 재건 투자비

자료 : 박태규, 한반도통일에 따른 소요비용의 추계와 자원조달방안,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KDI 1997. 참고

○ (기존 추정의 한계) 기존의 추정 사례들은 편익이 제외된 총비용의 관점에서 이뤄졌으며, 추정 방법에 있어서도 한계점을 갖고 있음

- 기존의 통일비용 연구는 통일편익에 대한 고려가 무시된 채 남한이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Total Cost)의 관점에서 이뤄짐
  - 통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뿐 아니라 남북한에 편익도 발생
  - 그러나 기존 사례들은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되어야 할 총비용만 고려함으로써 천문학적인 통일비용만 산출되었으며, 통일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가중시킴
  - 통일비용에서 통일편익이 제외된 비용을 '통일 순비용'이라고 하며, 통일 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통일 순편익'이 됨
  
- 목표소득방식의 경우 계량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거나 또는 과도한 목표소득을 기초로 추정이 이뤄짐
  - 주로 쓰이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은 완전경쟁시장과 생산요소의 완전균형 등 비현실적 가정을 기초로 함
  - 또한 남북 간의 현저한 소득격차(현재 남한대비 북한 주민의 소득은 5% 수준에 불과)를 무시하고 남한과 비슷한 수준의 과도한 목표소득을 설정
  - 이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소요될 총통일비용만이 과대하게 추정되어 통일에 대한 비용 부담과 부정적 인식을 초래함
  
- 항목별 추정방식의 경우 중장기적인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비용 추정이 불가능하며,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짐
  -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 항목들을 추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추정자체가 불가능함
  - 또한 통일비용 항목들은 실제 통합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실제 비용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음
  - 이외에도 일부 항목은 현재의 정확한 북한 실태 추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항목별 비용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
  - 예컨대, 경제적 투자비용을 GDP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위기관리비용 추정에 있어서 GDP에 기반영된 재정 지출 항목들이 중복됨

### 3. HRI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추정

#### 1) 통일비용의 추정

- (개요) 목표소득방식을 적용하여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추정
  - 통일비용의 추정 대상은 경제적 분야로 한정하며, 그중에서도 대북 SOC 투자 및 북한경제 재건비용 등의 남한의 대북 투자비용만을 목표소득 방식을 통해 추정하고자 함<sup>1)</sup>
  - 현재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는 북한 경제의 여건 및 낙후된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최소 목표소득을 3,000달러로 설정한 후, 추가적으로 7,000달러, 1만달러 달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
- (추정방법)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비용 산출을 위해 한계자본산출계수(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를 적용하여 추정
  - 한계자본산출계수는 생산량 1단위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본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북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필요한가를 목표소득과 한계자본산출계수를 적용하여 추정하고자 함
  - 한편, 자본산출계수는 한 국가의 산업구조와 인프라, 생산요소의 생산성과 경제 흡수 능력 등이 반영된 결과로서 단기간 내에 큰 변동이 없어 과거 남한의 경제성장 과정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임
  - 따라서 통일 후 북한의 경제성장은 과거 비슷한 소득 수준에 있었던 1970~80년대 남한의 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가정
  -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77년 1,012달러에서 10년 만인 1987년에 3,110달러로 늘어났고, 15년 만인 1992년에는 7,007달러로, 18년 만인 1995년에는 11,432달러로 증대

1) 대북 SOC투자 및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대북 투자비용은 북한 주민의 소득증가와 남북 간 경제력 격차 해소의 가장 직접적 방안의 하나일 뿐 아니라, GDP는 한 국가의 총괄적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에 이를 목표소득 방식으로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 삼았다.

< HRI 통일비용 추정 방법 개요 >

구분	내 용
추정 방법	- 목표소득방식
추정 기준	-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올리는데 드는 남한의 경제적 투자 비용 · 7,000달러와 1만달러도 추가적으로 추정
계산 방법	$[(\text{목표소득} - \text{통일시점 소득}) \times \text{북한인구}] \times \text{한계자본산출계수}$
주요 가정 (통일 시점)	-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00달러 - 북한의 인구는 2,500만명 - 자본산출계수는 3.14적용(남한 1970~80년대 평균치) - 통일후 북한 경제성장은 과거 남한의 성장 추이를 따름

① 북한 주민 1인당 소득 3,000달러 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향후 10년간 1,57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 통일 이후 북한이 과거 남한의 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할 때,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3,000달러가 되는 데 10년 소요
- 통일시점에서의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은 1,000달러, 북한 인구는 2,500만 명으로 가정
- 한계자본산출계수는 남한의 과거 국민소득을 기초로 1970년대(2.72)와 1980년대(3.56)의 평균치인 3.14를 적용 (한국은행 추정치 적용<sup>2)</sup>)
- 따라서 목표소득과 통일시점의 소득차액(2,000달러)과 북한 인구(2,500만명)에 한계자본산출계수(3.14)를 곱하면 1,570억달러

$$\text{통일비용} = [(\text{목표소득} - \text{통일시점의 소득}) \times \text{북한 인구}] \times \text{한계자본산출계수}$$

2) 현재 북한의 낙후된 경제 사정과 산업구조 및 주민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자본산출계수는 이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일 후 북한지역의 경제성장은 10년 이상의 중장기에 걸쳐 남한의 경제성장 추이를 따른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1970~80년대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②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북한 주민 1인당 소득 7,000달러와 1만달러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4,710억달러, 7,065억달러임

- 통일 이후 북한이 과거 남한의 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할 때,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7,000달러와 1만달러가 되는 데 각각 15년과 18년이 소요
- 각각의 통일비용은 남한이 모두 부담하게 될 경우의 추정치이며, 정부의 재정 지출과 민간 차원의 투자를 모두 포괄한 것임

< 북한 1인당 목표소득별 통일비용 >

목표소득	3,000달러	7,000달러	1만달러
통일비용	1,570억달러	4,710억달러	7,065억달러
소요기간	10년	15년	18년

2) 통일편익의 추정

- (개요) 경제적·비경제적 통일편익 중 경제적 편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편익 중에서도 대북 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와 **통일로 인한 절감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
- 우선 통일비용의 대북 투자로 남한이 얻게 되는 경기활성화 효과를 목표 소득방식으로 추정함으로써 통일비용과 편익 추정 방법의 일관성 유지
- 대북 투자를 통한 남한의 경기활성화 효과는 국민총소득(GDP)에 상당 부분 반영되므로, 통일비용 투자에 따르는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정**
- 다만, 이는 투자에 따른 생산증대(부가가치) 효과만을 고려하므로 **통일에 따른 절감효과**를 통해 보완하며, 이는 **국방비 감축 효과**와 **국가위협도 감소 효과**를 항목별로 추정하여 합산
- 특히, 국가위협도 감소 효과는 외채상환이자 부담 절감액을 통해 추정하며, 이는 통일이후 리스크 프리미엄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데 근거함

< HRI 통일편의 추정방법 개요 >

구분	내 용
추정 방법	- 목표소득방식을 주로 하되, 항목별 추정방식을 추가하여 보완
편의의 정의	- 통일후 북한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비용을 투자할 경우 남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생산 효과에 국방비 절감액과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를 추가 · 통일편의 =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 남한의 국방비 절감액 +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
계산 방법	- 부가가치유발효과 : 통일비용 × 부가가치유발계수 - 국방비 절감액 : 국방비(현재수준) - 국방비(독일감축비율 적용) ※ 독일의 경우, 통일전 서독의 국방비는 GDP 대비 2.5%였으며 통일 이후 10년간 1.5%수준으로 감소 - 국가 위험도 감소 효과 : 대외채무액 × 리스크 프리미엄 ※ 선진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약 80~100bp이며, 한국은 100~120bp로 선진국에 비해 약 20bp 높은 수준
주요 가정	- 국방비는 통일 독일의 경우와 같은 수준(1.5%)으로 감축 -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은 통일후 10년만에 3,000달러 도달 - 대북 투자시 원자재와 기술인력은 대부분 남한에서 조달 - GDP대비 외채비율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해외조달금리가 약 20bp 인하

- (추정 방법) 통일비용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독일 국방비 감축 비율을 적용한 국방비 절감액, 그리고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른 외채상환이자 부담 경감액을 추정하여 합산

- ① 부가가치유발 효과 :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통일비용의 투자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sup>3)</sup>
  -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투자비용이 남한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
  - 2008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66이며, 앞서 추정한 통일비용을 곱하여 통일비용의 북한 투자시 남한 산업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추정
  - 다만, 남한의 산업연관표를 북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실제 경제적 효과는 20%포인트 절하된 값으로 조정

3) 한국은행은 대북 SOC가 남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박석삼, 『대북 SOC 투자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2000. 9

$$\text{부가가치유발효과} = [\text{대북 경제적 투자비용} \times \text{부가가치유발계수}] \times \text{실제 경제적 효과 (80\%)}$$

② **국방비 절감 효과** : 남한이 현재 국방비 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통일 이후 감축될 경우와의 차이를 추정

- 통일전 GDP 대비 국방비는 서독이 2.5%였으며 통일 10년 후 전체 독일의 GDP 대비 1.5% 수준으로 감축<sup>4)</sup>
- 2009년 현재 남한의 GDP대비 국방비 비중은 2.8%이며, 이 비율이 유지될 경우 국방비와 통일 이후 독일 수준으로 감축될 경우의 국방비의 차액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합산

$$\text{국방비 절감 효과} = \sum (\text{분단 유지시 연도별 국방비} - \text{통일후 국방비})$$

- ※ 분단시 국방비는 현재 남북한의 GDP대비 국방비 비율(남한 : 2.8%)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액수임
- ※ 통일후 국방비는 남한의 국방비가 10년에 걸쳐 GDP대비 1.5%에 이르도록 감축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추정된 액수임

주 : 남한의 향후 GDP추정치는 골드만삭스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의 추정 자료 이용

③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 : 통일 이후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르는 외채 상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추정

- 2010년 10월 현재 한국의 GDP대비 외채 비율은 4.44%로 추정되며, 이 비율이 통일 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지정학적 리스크 제거로 선진국 수준으로 해외차입 금리가 인하될 경우, 현재보다 약 20bp(0.2% 포인트) 절감 효과 발생
- 2010년 현재 선진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80~100bp이며, 남한의 경우는 100~120bp임

$$\text{국가위험도 감소 효과} = \sum (\text{연도별 GDP대비 외채규모}) \times \text{외채상환금리 인하 효과(0.2\%)}$$

4)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④ 기타 편익 : 남북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편익

- 개성공단 등 북한 인력 고용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 2010년 현재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월 평균급여는 90.5달러로서 한국의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인 2,060달러(230만원)와 비교할 때 약 23배의 차이
- 통일 이후 북한 근로자의 고용 증대로 제조업과 기타 노동집약 산업의 생산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

- 북한 내 관광 자원의 활용 및 개발을 통한 관광 수입 증대 효과

- 금강산, 개성 등 기존 관광지역을 활성화하고 백두산, 묘향산 등을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관광 수입이 증대
- 또한 비무장지대(DMZ)에 생태·평화 공원 및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조성함으로써 관광 수익의 증대가 예상

-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을 통한 해외 자원의 수입 대체 효과

-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지하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약 7,000조원으로 평가되며, 200여종의 광물자원 가운데 경제성이 기대되는 광종은 20여종에 이룸<sup>5)</sup>
- 특히, 철광석, 석탄 등 주요 광물 자원 뿐 아니라 세계적인 매장량을 자랑하는 마그네사이트 및 희토류인 마그네슘, 티타늄 등의 개발로 자원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

- 남북을 연결하는 각종 교통 인프라의 개발로 인한 물류비 절감 효과

- 남북한 교통망과 TCR(중국), TMR(몽골), TSR(러시아) 등 북방 지역으로의 교통망이 연결됨으로써 물류비 절감
- 통일 이후 한반도는 대륙(중국, 러시아)과 해양(일본, 미국, 동남아시아)를 잇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성장하게 될 전망

5) 2010. 10. 11.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국정감사 자료

### 3)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추정 결과

#### ○ (종합) 경제적 부문에서의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추정한 결과,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통일 후 북한 1인당 소득 3,000달러 달성에 있어서, 통일편익은 통일비용 1,570억달러보다 약 630억달러 많은 2,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또한 7,000달러와 1만달러 목표에 있어서도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각각 650억 달러, 1,300억달러 큰 것으로 추정되었음
  - 따라서 통일은 남한에게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막대한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편익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비경제적 시너지 효과로 인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나, 통일 비용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함께 감소하게 됨
  - 통일로 인한 각종 경제적 편익 외에도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의 비경제적인 통일편익까지 고려할 때, 통일비용 대비 통일 편익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 결과 >

(단위 : 억달러)

목표소득		3,000달러 (10년)	7,000달러 (15년)	1만달러 (18년)
통일비용(A)		1,570	4,710	7,065
통일편익(B)	부가가치 유발	836	2,509	3,764
	국방비 절감	1,226	2,623	4,245
	국가위험도 감소 (외채조달비용절감)	135	230	341
	소계	2,197	5,362	8,350
통일 순편익(B-A)		627	652	1,285

주 : 통일편익(B)에는 통일 후 남북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관광 및 지하자원 개발 등의 기타 편익은 포함되지 않았음

#### 4. 시사점과 과제

##### ○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차단하고,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 (부정적 인식의 차단)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확산을 차단
  - 비핵·개방·3000 구상에 맞춰 통일 후 북한주민 소득 3,000달러 도달 목표를 설정할 경우,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통일비용은 한시적으로 지출되는 데 반해, 통일편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인식의 확산 노력이 필요
  - 통일한국의 비전과 함께 통일한국이 얻게 될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을 적극 홍보하고, 통일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의 통일의식 함양
  
- (국민적 합의 도출) 안정적인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통일방안과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 통일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통일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
  -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함께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남북 통합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 연구 추진 및 대국민 홍보
  -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 미사용분 적립 및 통일기금 조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통일세 부과 방식 등을 결정
  - 이외에도 시중부동자금을 장기저리의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거나 통일복권 발행, 탄소배출권 사업 추진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장기 차관 도입 등의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사전적 통일비용 지출을 확대하고, 우호적인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국들의 협조를 유도**

- **(사전적 통일비용 지출 확대)**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적인 통일비용의 지출을 확대
  -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통일비용 부담도 커지므로, 통일 이전에 경협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경제력 격차 축소가 필요
  - 통일 이전의 경협 활성화 비용은 소모성(sunk cost)이 아니라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 투자비용'이란 인식을 갖고,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해 북한 경제 희생 및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원
  - 또한 통일 이후 지출되는 통일비용의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시너지효과가 큰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사전 대북 투자를 우선적으로 추진
  - 예컨대, 북한 기간산업 개발(제철 및 정유), 인프라 구축(전력시설, 도로 및 항만), 금강산·개성 특구 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
  
- **(우호적 통일 환경 조성)**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국들에 대한 통일 외교를 강화
  -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공조 노력을 통해 평화 통일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
  - 특히, 남북통일이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변국들에게 이해시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협력을 유도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최성근 선임연구위원 (2072-6223, csk01@hri.co.kr)

< 부록 > 기존 통일비용 추정 사례

○ 통일비용 추정은 통일의 형태와 방법, 시기와 목표수준, 추정방법 등에 따라 최소 500억~5조달러로 큰 편차가 존재

작성기관 (연도)	통일시점	통일비용	추정방법
KDI (1991)	2000	점진적 통일: 2,102억달러 급진적 통일: 3,121억달러	-
이상만 (1993)	2000	10년간 2,000억달러	-
마커스놀랜드 (1996)	2000	3조 1,720억달러	목표소득방식
박태규 (1997)	-	통일후 5년: 남한GNP 8.7%~ 11.3% 통일후 10년: 남한 GNP 7.47%	항목별추정방식
신동천·윤덕룡 (1998)	-	887억달러~2,808억달러	목표소득방식
골드만삭스 (2000)	2000 2005	7천700억~3조 5천억달러	목표소득방식
이영선 (2003)	-	점진적: 732억달러 급진적: 1,827억~5,614억달러	목표소득방식
삼성경제연구소 (2005)	2015	546조원	항목별추정방식
랜드연구소 (2005)	-	500억~6,670억달러	목표소득방식
신창민 (2007)	2015 2030	8,577억~1조 3,227억달러	목표소득방식
한국은행 (2007)	-	5,000억~9,000억달러	목표소득방식
조세연구원 (2008)	2011	통일후 10년: 남한 GDP 7~12%	-
피터백 (2010)	-	2조~5조달러	목표소득방식
미래기획위원회 (2010)	2011	점진적: 3,220억달러 급진적: 2조 1,400억달러	-
전경련 (2010)	-	3,500조원	전문가설문조사

자료 : KDI “통일비용 관련 기존 연구 자료”, 『북한경제리뷰』 2010.

양운철 “통일비용의 추정과 자원 조달 방안”, 『세종정책연구』 2006과 해당 보고서 참고.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3/4
미국	0.0	-2.6	-4.9	-0.7	1.6	5.0	2.6	3.7	1.7	-
유로 지역	0.5	-4.1	-2.5	-0.1	0.4	0.2	1.7	0.3	1.0	-
일본	-1.2	-5.2	-16.4	9.7	-0.3	3.4	2.8	5.0	1.5	-
중국	9.6	8.7	6.2	7.9	9.1	10.7	10.5	11.9	10.3	9.6
한국	2.3	0.2	-4.3	-2.2	1.0	6.0	5.9	8.1	7.2	4.5

주: 1)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10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10월 22일	10월 28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2.55	2.66	0.11%p
	엔/달러	90.76	96.65	92.93	81.33	81.03	-0.3¥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3919	1.3927	0.0008\$
	다우존스지수(p)	8,776	8,447	10,428	11,147	11,114	-33p
	닛케이지수(p)	8,860	9,958	10,655	9,376	9,366	-1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23	3.23	-
	원/달러(원)	1,259.5	1,273.9	1,164.5	1,123.0	1,123.8	0.8원
	코스피지수(p)	1,124.5	1,390.1	1,682.8	1,897.3	1,907.9	10.6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10월 22일	10월 28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81.46	82.13	0.67\$
	Dubai	36.45	71.85	78.06	79.06	80.23	1.17\$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95.55	299.89	4.34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